

도, 3600억 규모 2차 추경 편성

민생경제·특별자치도 준비 등에 '방점'

전북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과 미래 먹거리 발굴 전북특별자치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3,66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8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한편 128년간 이어져온 전라북도 시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북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8,623억원 대비 3,662억원(3.7% ↑)이 증가한 10조2,285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22억원(4.4%

↑), 특별회계 70억원(0.7% ↑), 기금 170억원(1.7% ↑)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 1,283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중소기업 안정화 대책을 위해 △전북 중소기업 육성기금 71억원 △내내 투자 및 이전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301억원 지원 등을 구성하고 있다.

이외, 도는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479억원,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257억원, 전북특자도 시행 준비 예산 42억원,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 세계 캠퍼스 대회 개최를 위한 118억원, 도민안전, SOC 등 도민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453억원 등도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추경예산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담겼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대

책 등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는 방법을 고심해 왔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발로 뛰어 좋은 기업은 유치하고, 주력산업 개편,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농생명화 문화체육관광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 연계 등 100년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준비해서,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 하려면 전북도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돼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4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5일에 열린 전담회의 제40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빈곤·소외 문제 해결 노력”

민주, 어버이날 맞아... “부모님 헌신 기억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끈질을 올린다”며 이틀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지식 세대에게 더 좋은 미래를 물려주려는 부모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도 “눈물겨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광활하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과 소외 문제를 해결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주 69시간제 개악을 저지하고, 주 45일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부모가 행복해야 모든 가정이 안정되고 우리의 미래도 밝아진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합계연속 삶의 무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 비율도 OECD 국가 중 1위”라며 “젊은 부모님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과 가정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다반사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을 찾아가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모와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우분 연료화사업 협약식 전국 최초로 새만금 3단계 수입개산대체 일함으로 추진 중인 우분 연료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우분 연료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에 김민영 도지사를 비롯한 박법영 국립축산과학원장, 송호석 전북지법환경청장, 새만금 유역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 단체인, 도의회 이병철 환경복지위원회장과 SGC에너지(주), OCI SE(주), 한화에너지(주) 대표, 김창수 전주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분 연료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 총선 공천률 확정

부적격 기준에 '학교폭력' 추가... 부적격심사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서 10% 감소 적용

후보자 정보 제공도 확대... 경선불복·탈당·징계경력자, 경선시 권당 선거인단에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률)를 확정했다. 이번 공천률은 지난 총선에서 도입했던 '시스템 공천' 기준은 유지하며 도덕성 검증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가결했다.

중앙위원 594명 가운데 74.92%인 44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이 370명(83.15%), 반대가 75명(16.85%)이었다. 앞서 진행됐던 권리당원 공천률 투표에서는 반대 비율이 약 40%에 육박했다.

권리당원 119만7261명 가운데 26만 9944명, 즉 23.38%의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16만2226명(61%), 10만 3718명(39%)이 각각 찬성과 반대에 표를 행사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권리당원 찬반 비율이 6대4 정도인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가 잘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안정이라는 우리 당의 큰 가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새롭게 낫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엔 만들어진 특별당규의 취지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트코스(TF) 의결 이후 당무위원회 및 권리

당원 투표 절차를 거친 이번 공천률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고 괴롭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지난 총선 때는 출마를 위해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총선 때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경선불복, 탈당 징계경력자의 경우 경선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정보 제공된다.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 조항도 있다.

청년 정치인이 공천 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 이상 우위에 있을 경우 단수공천된다. 2위 후보자도 청년이라면 기존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 격차 미만 단수 선장이 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 유공자 공천 심사도 가산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제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트코스(TF) 단장인 이계호 의원은 이날 중앙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2대 공천 과정에서 단수 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 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현역에 대한 우대 조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정치인 단수 공천 조항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신인 후보층을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많다. 그런 점에서 신인에 대한 여러 제반 우대 조치는 지원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외 "일부 정치 신인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서 미리 사정에 당일 명부를 줘서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규정됐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 의장 및 부의장을 각 변제일 의원과 어기구 의원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뉴스스

민주 “과거 팔아 미래로 갈 수 없다”

한일정상회담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돈 잔치를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존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틀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건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팔아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적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광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돌아오지 않는 메타버스는 달 성월 수 없다"며 "김대중·오부처 선인 외 어제의 한일 정상외교가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동의, 국민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투인의 전면 철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 몫시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지는 데 반대하는 국민안게일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균형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국가 이익을 훼손될 것"이란 국민의 우려 크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한일 관계가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가 미일 동맹 하 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전체적인 한국 국익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음”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의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의회의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 출석장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원의 의정비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지난해 12월 28일)했으며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외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의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의원 징계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력 제고 마중물 돼야”

영명선 도의원, 도 기획조정실 주관 세미나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영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8일 전 북도 기획조정실 주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영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총 12개 지자체(광역시 15개,



기초 107개)에 연 1조 원(광역시 25%, 기초 75%)이 10년(2022~2031년)간 배분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이다. 광역과 달리 기초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배분되기 때문에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의 매우 중요하다.

영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처의 평가체계 및 성과분석 체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며 "명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우리 도와 시·군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김성수 도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에 위촉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1)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형기)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소멸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서 17개 시도의의회가 각 지역의 주도성 확보·자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



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고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특별위원회에 위촉된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17개 시도 중 지역소멸이 가장 심각한 전라북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